

[로스쿨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2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어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법전원을 통해 이룬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가 양성을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송석윤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주제발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 최유경 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가, 토론은 강민정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공태운 차장(한국경제신문), 김두열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김태환 변호사(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선특위부위원장),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최명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맡았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전원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아본 법전원 시대 7년/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전원 제도 도입 7년은,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기간이었고, 법전원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과거방식이 법전원 제도 취지 달성을 위협하며 불편하게 동거하는 기간이었다. 현재 법전원을 통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법률가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이 촉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시키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전원 제도와 모순되는 변호사시험의 정원제 선발시험 성격을 빨리 없애고, 법전원 제도 시행과 함께 바뀔 수밖에 없는 법관 및 검사임용등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김관기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는 “제주, 강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법전원이 지역적 분권을 강제로라도 신장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의 사법시험은 다양한 경로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막는다.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업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서생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위해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는 특권적인 법전원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법전원이 부자들에게 편향적인 기회를 줌으로써 음서제를 결과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실 법전원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는 우월한 지위를 의도하지 않았다. 부자에게 기회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은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최유경 박사

최유경 박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759명, 전체 선발 인원 대비 약 6.14%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했고, 이 기간 동안 특별전형자 약 93,64%에게 등록금의 88,14%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전형 입학자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다양한 전문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는 시도는 법전원 진입장벽 완화 방안으로서 특별전형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현재 특별전형제도는 세부유형과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법전원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